

려동물용품 등 기존 편의점에서는 주류가 아니었던 상품군 매출이 상승세를 탔다.

CU에 따르면 화장품 매출 증가율은 2014년 6.6%, 2015년 10.8%, 2016년 13.3%에 이어 2017년 18.5% 상승했다. 반려동물용품 매출 증가율은 2015년 30.3%에서 2017년 55.4%로 치솟았다. 이는 신속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대형마트나 전문점에서 구매하던 비식품류를 편의점에서 많이 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업계는 이런 추세에 맞춰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점포 수 급증으로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편의점 점포당 매출(전년 동월 대비)은 2017년 2월 사상 처음으로 감소(-3.5%)한 이후 3월(-1.9%), 4월(-2.4%), 5월(-3.5%), 6월(-3.2%), 7월(-3.3%), 8월(-5.2%), 9월(-2.2%), 10월(-3.0%), 11월(-3.1%), 12월(-2.9%) 등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온라인쇼핑

온라인쇼핑 시장은 모바일(휴대전화) 쇼핑을 중심으로 2017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7년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8조2천273억원으로 2016년보다 19.2%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7조8천360억원으로 34.6% 늘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비중은 61.1%였다. 이 비중은 매년 늘어 2015년 46.0%, 2016년 54.2%, 2017년 60%대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음·식료품(38.0%), 가전·전자·통신기기(24.3%), 여행 및 예약서비스(14.8%)에서 증가 폭이 컸다. 모바일쇼핑에서는 애완용품(70.1%), 가구(65.0%), 음·식료품(57.6%)이 많이 늘었다.

백화점 등 전통 오프라인 채널의 부진 속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신규 출점과 성장이 가로막힌 오프라인 업체들이 대거 온라인사업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온라인쇼핑 업계의 출혈경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적자행진을 이어가면서 온라인쇼핑 업계의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경쟁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2017년 적자 규모가 2016년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년째 주요 업체 중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 중인 쿠팡이 2016년에 이어 2017년 5천억원 안팎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의 적자 규모는 2016년보다 소폭 줄어든 1천여억원으로 추산됐다.

■ 면세점

면세점 업계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2017년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128억 달러 규모로 2016년 106억 달러보다 20.8% 증가한 역대 최대치였다. 외국인



▲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관광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입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이 76억 달러 규모에서 94억 달러 규모로 23.8% 늘었다. 반면에 외국인 이용객은 2천63만 명에서 1천511만 명으로 26.8% 감소했다. 보따리상 효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경쟁 격화에 따른 할인 마케팅 등으로 실속은 없었다.

2017년 국내 주요 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대 중반 수준으로 약 4%였던 2016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의 2017년 1~3분기 매출액은 3조9천896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2.3% 감소했으며, 이 기간 영업이익은 87.8% 급감한 350억4천만원이었다. 사드 보복으로 가장 충격이 컸던 2017년 2분기에는 2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신라면세점의 2017년 매출은 3조5천719억원으로 2016년보다 7.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85억원으로 25.8% 감소했다.

사드 보복이 장기화하자 면세점 업계도 안정을 찾지 못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임대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담배·주류 매장을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4개 사업권 가운데 3개를 해지했다.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청, 부처로 승격…중소벤처기업부 출범

2017년 7월 20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로 중소기업청이 1996년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에 장관 부처인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로 승격됐다. 중기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주요 공약사항이다.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중기청뿐만 아니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시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승격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존 중기청은 청장 아래 차장과 1관, 6국 체제였지만, 중기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로 바뀌었다. 인력은 중기청 353명에서 중기부 431명으로 78명 늘었다.

중기부에 추가된 기능은 중기정책 평가 및 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이다. 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혁신과 등이 신설됐다.

타 부처로부터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산업부, 3과), 창조경제(미래부, 1국 5과), 기술보증기금 관리(금융위, 5급 1명) 기능 등을 넘겨받았다. 이관 기능의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넘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약칭은 중기부이고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다. 중기부 소속기관인 지방청과 국립공공의 조직 및 인력에는 변동이 없다.

■ 중기부 출범 118일 만에 초대 홍종학 장관 임명

중기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지명됐지만 역사관과 종교관, 정치 이념 등이 논란을 빚으면서 자진 사퇴했다. 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해 종교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이 외에도 뉴라이트 역사관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탈세, 주식 무상 증여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렸다.

박 후보자 낙마 후 두 번째 후보자가 된 홍종학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시절 재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강조해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의 대물림', '뜨개질 증여'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장관으로 임명됐다.

중기부로 승격된 지 118일 만에 초대 장관에 임명된 홍 장관은 벤처 투자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복합쇼핑몰 규제 등을 정책 목표로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이 11월 2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직원들에게 인사말하고 있다.

■ 신설법인 10만 개 육박, 역대 최대·9년 연속 증가

2017년 신설법인은 2016년보다 2.3%(2천175개) 늘어난 9만8천33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설법인 수는 2009년 이후 9년 연속 증가했다.

신설법인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만629개(21.0%)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1만9천463개(19.8%), 건설업 9천963개(10.1%), 부동산업 9천379개(9.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음식료품 시장 확대로 제조업 분야 신설법인이 2016년보다 8.4% 증가했다.

신설법인 증가율 1위는 2016년 대비 215.8% 늘어난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으로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광주(18.9%), 강원(13.7%), 세종(12.9%), 전남(10.6%)에서 2016년보다 법인 설립이 증가했으며 서울(-1.9%), 인천(-0.6%)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3만5천86개, 35.7%)와 50대(2만6천527개, 27.0%) 창업주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 폭은 60세 이상이 1천446개(16.9%)로 가장 컸다.

■ '제2의 붐' 조성한다...정부,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 발표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활기를 잃은 국내 벤처 생태계에 '제2의 붐'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놴다.

우선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벤처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중심에서 벤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바꾼다.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도 개선한다.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기업을 심사하도록 보증 및 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벤처투자 유형에 기관투자가 외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 크라우드펀드 등 6개 투자자 유형을 추가하고, 연구개발 유형은 연구인프라 인정 요건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23개)도 폐지한다. 단, 사행·유형업종 5개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여관업, 부동산업, 숙박업, 미용업 등의 업종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렸다.

벤처기업 규모도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자금이 벤처로 더 빨리, 더 많이 유입되도록 벤처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도록 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도 폐지한다.

정부는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中企 기술 훔치면 최대 10배 배상...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 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고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술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 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어서 소송 장기화, 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 관련 행정부처의 조사 및 수사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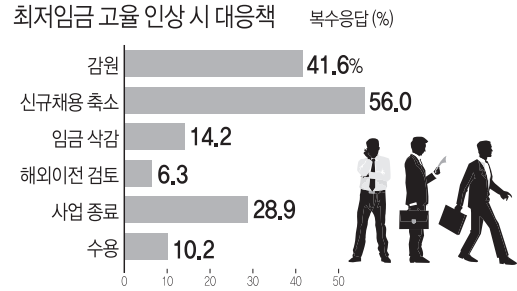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경영 부담 커져

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원칙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의 취지에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급격한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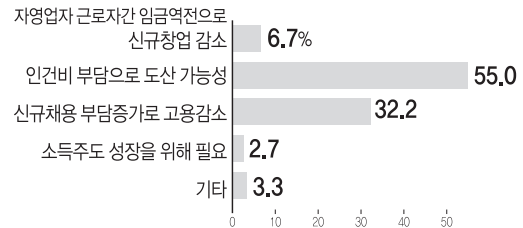
정부가 예고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2017년 대비 16.4%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업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2018년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2017년보다 15조2천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숙식비 등 고정성 임금을 산

중소기업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2017년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 대상 조사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의견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입 범위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심한 인력난이 악화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천억원으로, 전체(12조1천억원)의 약 70%에 이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1~29인 영세 사업장에서 3조3천억원, 30~299인 사업장에서 5조3천억원이 더 필요하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동향

■ 개요

2017년 세계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호조에 힘입어 경영실적은 대체로 개선됐으나 미국·중국의 통상 압박,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찰 수사 등 잇단 대내외 악재로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